

NGO SERIES #01



시민사회, 사회운동, 신사회운동

: 시민운동의 이론적 이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 간 사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NGO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날로 커지고 있다. NGO의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정부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3,800여개가 넘고 있다. 언론에서는 NGO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학계에서도 ‘비영리학회’, ‘NGO학회’ 등 NGO 관련 연구그룹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NGO가 급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O의 급성장은 한국사회의 강한 활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NGO의 양적 팽창에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NGO의 질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계의 노력이다. 최근 들어 NGO 관련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NGO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NGO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선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NGO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찬반 양론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교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기업원에서는 한국의 NGO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NGO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NGO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한편 살려나가야 할 장점들을 옹호함으로써 NG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언론인, 일반인들에게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6월

자유기업원장 민병균

훑어보기

본 저서는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미약한 풍토에서 이들 운동에 대한 개념 정의에 충실함으로써, 한국 시민운동의 정체성 파악을 위한 학문적 차원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먼저 시민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권리’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공법적인 권리, 즉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한다. 즉, 고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불리워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특권’은 점차 보편화되었으며, 이러한 ‘특권’의 보편화 과정은 ‘시민’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의미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여기서 ‘특권’의 보편화를 통해 발생한 ‘시민’ 개념의 보편화는 결국 시민사회의 발생을 가능케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민사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초기 시민사회는 집단적 이익추구의 성격이 강했다. 집단적 이익추구의 단초는 사실상 중세에서 발생한 ‘계급’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등장은 산업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집단적 이익추구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헤겔(Hegel), 슈타인(Lorenz von Stein), 맑스(Marx)의 사상 속에서 찾아진다. 맑스와 슈타인, 그리고 헤겔은 동일하게 시민사회의 중심에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개인간의 갈등과 경쟁은 생산관계로 환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과 경쟁은 ‘계급’이라는 ‘집단적 차원’의 경쟁과 갈등으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맑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결국 자본주의사회의 대두는 ‘이익의 집단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이익의 집단화는 이익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태동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분명 집단적 이익추구를 위한 문제해결 방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적 시민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저서는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모두 이익추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와 갈등해결 방식’의 하나라는 점을 서술한다. 하지만 물질적 차원의 욕구와 이익이 지배하던 산업사회는 집단적 차원의 이익 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반면, 탈물질적 욕구와 그에 따른 이익이 지배하는 사회는 개인적 차원의 이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각기 사회의 문제해결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개념 정의와 실제적 양태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이후 신사회운동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 이를 통해 시민운동이란 왜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목차

발간사	3
훑어보기	4
I. 문제제기	11
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11
2. 한국 신사회운동 연구현황과 문제점	13
II. ‘시민’의 개념과 ‘시민사회’ - 개념적 · 사상적 차원의 고찰	20
1. 고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	20
2. 로마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	21
3. 중세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	23
III.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 - 사상사적 고찰	25
1. 헤겔에 있어서의 시민사회	25
2. 맑스(Marx)와 그람시(Gramsci)에 있어서의 시민사회	32
IV. 사회운동	35
1. 사회운동의 개념	35
2. 사회운동의 발생원인	38
3. 사회철학과 사회운동	40
V. 신사회운동	46
1. 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의 전환 -실례를 통해본 전환과정: 독일에서 나타난 실제적 운동사를 중심으로	46
2. 신사회운동의 개념과 특징	47

VI. 결 론	55
---------------	----

참고문헌	59
------------	----

국내문헌	59
------------	----

외국문헌	59
------------	----

I. 문제제기

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한국에서 사회운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사실상 그리 오래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상징이 학생데모였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은 매우 활발하였고 1987년 이후 노동운동 역시 상당한 정도로 활성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미약했다. 그 이유는 1987년 이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이 민주 대 반(反)민주의 구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들 운동세력은 민주화를 추구하는 ‘선(善)한 존재’였고 이들과 대립하는 존재는 ‘악(惡)한 존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존재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지지의 대상이었고 악한 존재는 심층분석이 필요없는 청산의 대상이라는 단순논리가 지배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악의 편에 선 기회주의자의 논리에 불과했고, 이러한 분석을 가한 사람들은 ‘어용’으로 몰리는 분위기였다. 이런 이유로 학계에서는 사회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의 긍정적 기능만을 논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어왔다.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미약했던 우리의 전통은 신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신사회운동을 표방하는 시민운동 단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이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단체는 대략 144개 정도인데, 이들 중 72%가 1987년 이후에 조직된 단체이다.¹⁾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사회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한 이후부터라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신사회운동의 대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라 하더라도 신사회운동 혹은 구(舊)사회운동(이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이전 권위주의 정권이 존재하던 시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 혹은 사회적 분위기는 그 존재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일종의 ‘관성’이 있어 과거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진 지 10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소극적 연구행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시민운동이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그 세력이 확장되었고, 이로부터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1) 권태환·이재열,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한국사회과학』, 20집 3호, 서울: 서울대학교, 1998. 9, pp.7-43, 여기에서는 p.12.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학문 차원의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좀 더 적극적 의미에서의 한국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분석하는 하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존의 신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본 저서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후 신사회운동이 사회운동과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이후 분석하게 될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운동의 형태, 의미, 조직, 운동 전개 방식, 존재목적 등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사회운동의 분석과, 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왜 신사회운동이 기존의 사회운동과 다른 형태를 가지는지에 대한 전제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이후 신사회운동을 설명하는데, 먼저 신사회운동의 주요한 기반인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점을 도출, 신사회운동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이후 신사회운동의 조직적 차원, 존재론적 차원, 그리고 운동 전개방식의 특성을 설명하여 신사회운동이라고 부르는 전반적 운동, 예를 들어 여성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일반적 시민운동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한국 신사회운동 연구현황과 문제점

지금까지의 신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시민운동이 케이블 채널까지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시점에 있으나 이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은 별반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상당히 많은 정치학자들이 대거 시민운동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이들 단체에 대한 개념적·체계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들 단체의 존재당위성을 주장하고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데 그쳐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이들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개념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경우

우리 학계에 소개된 사회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가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사회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보자. 1991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은 시민사회를 사상사적 맥락에서 접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특성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의 특성을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결부시켜 설명함으로써 시민운동의 발생환경인 시민사회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개념적 모호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 논문 26쪽에 “사회운동은 역사적으로 농민반란, 파업, 시위, 학생운동, 종교운동, 참정권 운동, 민권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집단적 에피소드(단순한 집단행위)와 사회운동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²⁾ 즉 농민반란을 사회운동과 등치시킴으로써 사회운동과 단순한 집단행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운동과 단순한 집단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사회운동 역사는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유럽사회에서 가장 큰 농민반란으로서 대표적인 운동은 칠리안 운동(Chilianistische Bewegung)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칠리안 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前)근대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운동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였고 인간 스스로의 투쟁과 노력에 의해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올 메시아에 의한 기적만을 바랐다. 유럽 학계에서는 이러한 농민반란을 사회운동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한 집단행위로 취급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위의 논문에서는 종교운동을 사회운동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종교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사회운동이

2) 신광영,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2호, 서울 : 한울, 1991. 12, pp.13-36, 여기에서는 p.26.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Raschke, Joachim, *Soziale Bewegungen. Ein historisch-systematischer Grundriß*, Frankfurt am Main/New York 1988, p.81. 참조.

근대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근대의 가장 중요한 산물 중의 하나인 ‘합리성’이 결여된 종교운동을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사회운동이 근대의 산물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은 시민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개념적 모호성에서 연유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시민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는 신사회운동에 관한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사회운동에 관한 논의들의 문제점은 신사회운동의 개념을 규명함에 있어 내용적 의미(substantive meaning)와 발생학적 의미(genetic meaning)를 혼돈·혼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즉, 신사회운동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운동 역시 “(신사회운동 개념을) 발생학적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신사회운동을 범세계적인 역사적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한편 그러한 역사적 현상의 내용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신사회운동의 유형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하며 구미중심적 시각을 극복하여 신사회운동에 대한 균형된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⁵⁾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은 서구사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운동에 주목하여, 이들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신사회운동을 설명하려 한다는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의 신사회운동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 역시 개념적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회운동의 전형적 형태인 노동운동과 중남미 신사회운동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읽는 이로 하여금 노동운동의 형태에 더욱 가까운 중남미 신사회운동을 어떠한 이유에서 신사회운동이라고 지칭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⁶⁾ 즉, 이 논문 역시 신사회운동이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존재라고 가정하면서도, 그 역사적 특수성과 신사회운동의 지역적 특성의 연관성과 개념적 독립성을 밝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이라는 논문은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적 상황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만을 제시할 뿐 신사회운동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⁷⁾ 개념 정의 없이

4) 조돈문,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구미와 중남미의 신사회운동 비교」, 『경제와 사회』, 28호, 서울: 한울, 1995. 12, pp.10-54, 여기에서는 p.10

5) 조돈문, 위의 책, p.12

6) 이 논문의 저자는 논문 41쪽에서 운동의 가치와 목표, 운동의 전략, 운동의 조직형태, 운동의 참여자, 그리고 사회구조적 조건 등을 기준으로 노동운동, 구미의 신사회운동, 그리고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구미의 신사회운동을 위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총 15개의 비교기준 중 9가지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과 중남미의 신사회운동은 15개의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유사성을 보이며 6개의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하다면, 본 논문에서는 왜 노동운동과 더욱 성격이 유사한 중남미의 운동을 신사회운동이라고 칭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생을 논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모호한 상태에서 시민운동을 비판한다는 것은 실제 비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논문 18쪽에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신사회운동은 계몽적 요소 보다는 자발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과정」이라는 연구논문 역시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맥아담(McAdam), 맥카시(McCarthy), 그리고 졸드(Zald)에 의해 시도된 종합화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⁹⁾ 이 논문에서는 “(두 단체)는 구성원의 물질적 이해관계 보다는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즉 주도적인 주체가 계급적으로는 신중관계급이지만 탈계급적인 가치지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경실련은 ① 빈곤타파를 위한 인간다운 삶의 영위, ② 비생산적 불로소득의 척결, ③ 경제적 기회균등 ④ 정부에 의한 시장경제의 결함 시정...” 등 주로 ‘탈물질’이 아닌 ‘물질적 재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단체라고 경실련을 소개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¹⁰⁾ 이러한 모순은 결국 신사회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지를 전개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2) 서구의 사회운동 혹은 신사회운동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기를 기피하면서 단순히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이라는 논문은 논문 첫 부분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가” 등을 논문의 문제의식으로 설정하고 있다.¹¹⁾ 이 논문 역시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논문 초반기에 서술하고 있으나 시민사회 속에서 왜 신사회운동이 발생·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한국적 시민운동이 해계모니의 변화와 변혁운동의 전망상실 등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역사적 특성에 입각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한국 시민운동이 어떠한 역사적 시민사회적

7) 김호기,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경제와 사회』, 48호, 서울: 한울 2000. 11, pp.8-34, 여기에서는 p.12.

8) 김호기, *Ibid.*, p.18.

9) 이성훈,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과정 -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비교연구”, 『가톨릭대 성심사회학』, 3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1997. 12, pp.189-232.

10) 이성훈, *Ibid.*, p.200.

11) 유팔무,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25호, 1995. 3, pp.104-121, 여기에서는 p.105.

특성을 담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어떠한 시민운동적 특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다. 특히 서구의 시민운동 개념이 한국의 시민운동에 적합한지 혹은 달라야 한다면 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논문이 시민사회 대한 접근만을 하고 있을 뿐 신사회운동 혹은 시민운동 자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시민운동의 현단계와 평가」라는 논문은 신사회운동과 결부되어 역시 모호한 상태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개념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NGO의 개념 구분을 비정부 조직, 유사 비정부 조직, 그리고 기부금 비정부 조직, 그리고 기업들에 의하여 조직된 기업연관 비정부 조직 등으로 구분, NGO에 대한 모호성을 탈피했다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운동으로부터 시민운동으로의 전환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동안 왜곡되고 억압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도 시민사회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은 그 운동들의 연장선상에 서 있고 그에 빚지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운동이 이전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이 창출·확대되었다는 것, 법적·제도적인 틀 내에서의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시민운동이 한국사회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안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것 등이 될 것이다.”¹³⁾

이러한 논지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논지가 시민운동의 역할만을 논할 뿐 서구 신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시민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이 그 개념적 차원에서 동일선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이라는 논문은 ‘탈권위주의체제’ 이전과 이후의 정치의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할 때 형성되었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뒤이은 상대적 실망과 불만이 “시민운동조직들에게 조직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한다.¹⁴⁾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억압기에는

12) 이흥균, “한국시민운동의 현단계와 평가”, 『철학과 현실』, 45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 6, pp.46-64.

13) 이흥균, *Ibid.*, p.55.

14) 조대엽,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한국과 국제정치』, 31호,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9. 12, pp.119-142, 여기에서는 p.133 ff.

대중적 의지와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도전적 사회운동은 존재할 수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민운동 조직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 수준의 활동에 머물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식적 대의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시민운동 조직들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확산되는 여건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¹⁵⁾ 물론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탈권위주의화 과정이 시민운동 형성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권위주의화 과정이 곧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실제 유럽의 경우 탈권위주의화는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반면 신사회운동의 발생은 1968년 이후에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곧 정치적 탈권위주의화와 시민운동의 활성화라는 함수관계 이외의 측면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시민사회 형성과 시민운동의 발생과정, 그리고 후기산업사회라는 특정사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측면의 고찰을 이 논문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과 사회운동」이라는 논문 역시 시민운동의 형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특수성을 해석하는데는 성공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¹⁶⁾ 즉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이 어떻게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의 시민운동이 서구의 시민운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시민운동을 서구사회의 시민운동과 같은 범주에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논문에서는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의 차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운동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과 형태의 운동인지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사회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의 정치 세력화와 제도적 차원의 권력화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

「신사회운동과 정치」라는 논문은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¹⁷⁾ 독일의 사회운동 이론가 마이레더(Rosa Mayreder)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에 의해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생성, 발전, 변화, 쇠퇴의 길을 걷는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운동의 생성단계로서 이데올로기 형성단계,

15) 조대엽, *Ibid.*, p.138.

16) 정학섭,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과 사회운동”, 『전북대사회과학연구』, 23호, 전주: 전북대학교, 1997. 2, pp.71-85.

17) 권태환, 송호근, “신사회운동과 정치.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한국사회과학』, 22집 1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3, pp.119-137.

발전단계로서 운동의 조직화 단계, 변화의 단계로서 독자적 운동의 단계, 그리고 쇠퇴의 단계로서 권력의 획득단계를 거쳐 사회운동은 운동으로서의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¹⁸⁾ 그가 말하는 정치적 권력획득이란 사회운동이 그들의 당면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이러한 영향력의 극대화 단계에서 권력을 획득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권력획득이 곧 운동의 종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권력의 획득이란 제도정치권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 ‘정치세력화’라는 용어 역시 제도적 정치권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정치세력화’가 곧 운동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이 논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제도화 과정을 밟으면서 사회운동의 가치가 확대발전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역으로 기존 정당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¹⁹⁾ 라는 부분을 해석한다면, 결국 제도적 정치권력화는 운동의 종말이 아닌 운동의 영향력의 극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제도권력화된 ‘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운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인지,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당연하지만 후기산업사회의 산물인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⁰⁾

(4) 운동에 관한 단순한 역사 서술로써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경우

「‘정치체제’와 낙천·낙선운동」,²¹⁾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정치·민중정치·시민정치」,²²⁾ 「사회개혁과 시민운동」,²³⁾ 「참여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²⁴⁾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²⁵⁾ 「4·13 총선과 시민운동 :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²⁶⁾ 등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들은 대부분 시민운동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과 사회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운동사적인 측면만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당위성 차원에서 시민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적·실질적 민

18) Wobbe, Theresa : Rosa Mayreder : Zum typischen Verlauf sozialer Bewegungen, Forschungsjournal NSB, Heft 2, p.100.

19) 권태환·송호근, Ibid., p.130.

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1) 조희연, “‘정치체제’와 낙천·낙선운동”, 「창작과 비평」, 107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2000. 3, pp.331-337.

22) 조희연,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정치·민중정치·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46호, 서울 : 한울, 2000. 5.

23) 황경석, “시민개혁과 시민운동”, 「철학과 현실」, 45호,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6, pp.23-45.

24) 김수진, “참여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민족예술」, 58호, 서울 : 민족예술사, 2000. 5, pp.32-34.

25)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비전 모색”, 「사회비평」, 25호, 서울 : 도서출판 나남, 2000. 8, pp. 146-176.

26) 김호기, “4·13 총선과 시민운동 :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사회비평」, 24호, 서울 : 도서출판 나남, 2000. 5, pp.142-156.

주주의를 위한 제언」이라는 논문은 시민운동의 자원동원에 있어서 참여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의 시민운동이 참여보다는 계몽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²⁷⁾ 특히 4·13 총선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론적 준거들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여한 채 단순히 당위성만을 역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지금까지 살펴본 논문과는 달리 비교적 성공적인 논문도 존재한다. 그 예로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은 신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포스트 맑시즘적 시각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여겨진다.²⁸⁾ 또한 「신사회운동의 제도화와 급진화」라는 논문은 비교적 신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연관관계를 잘 보여주면서 후기산업사회에서 연유하는 시민운동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잘 정리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개념에 대한 정립은 하나의 존재에 대한 비판 혹은 이해의 준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존재를 외국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면 왜 다른 존재를 같은 이름으로 불러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존재라면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한국 시민운동 혹은 신사회운동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서구의 신사회운동의 이론과 그 현상적 특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논하고 그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먼저 시민의 개념과 시민사회에 대한 사상사적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그 후 시민사회의 성격적 변화과정, 특히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운동의 형태적 변화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7)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사회운동의 특성'을 논할 때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28) 김호기,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4호, 서울: 한울, 1992. 6, pp.116-143.

29) 김성국, "신사회운동의 제도화와 급진화: 영국의 도로건설반대운동을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34집 3호,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9, pp.709-745.

II. ‘시민’의 개념과 ‘시민사회’ - 개념적·사상적 차원의 고찰

독일어에서 ‘시민(Bürger)’이라는 용어는 부르그(Burg)에서부터 유래한다. 즉 ‘시민’이라는 용어는 ‘성(城)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 라틴어로 ‘시민’을 뜻하는 부르가리우스(burgarius)라는 용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시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권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어적 차원만 보더라도 시민이라는 개념은 권리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상적·개념사적 차원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고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

유럽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은 고대 도시국가 개념으로부터 유래한다. 라틴어의 부르가리우스(burgarius)나 키비스(civis) 모두 고대에 있어서 도시라는 특별한 형태의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선상에서 발생된 것이다. 당시 존재했던 여타 비유럽적인 공동체 형태들과 차이는 이들 도시 국가들의 특징에 의하여, 그리고 그러한 도시국가들을 다루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민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발달하기 시작했다.³⁰⁾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폴리스(Polis : 도시국가)를 시민의 통합체라고 규정하고 그의 정치 철학의 상당부분을 바로 이 폴리스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때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을 ‘시민공동체적 사상’이라고 규정짓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폴리스(Polis)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이들의 권리 즉 시민의 권리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는 그들이 폴리스(Polis)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종속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은 우선적으로 사법적 절차와 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훗날 시민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부’를 아르케(arch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단어는 정부, 지배, 권력 또는 정부의 형태 등을 의미하며 그밖에도 관청 또는 평의회라는 의미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아르케는 ‘권력 혹은 지배권력’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 중 ‘인민들의 모임’이나 ‘인민 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르케(arche)를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시민들과 비(非)시민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아르케의 사용범위에 의해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30) Riedel, Manfred, “Bürger, Staatsbürger, Bürgertum,” in : Brunner, Otto, u. a. (Hrs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Stuttgart 1992, pp.672-725, 여기서 p.672.

이 정해지고 그러한 역할과 위치에 의해 시민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개념은 시민이라는 존재가 권리 혹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의 개념이란 경험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혈연적으로 시민이 결정되는가 아니면 사회적 규칙에 의해 시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의 사상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시민 개념의 한계라고 여겨진다.³¹⁾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이란 지배세력임과 동시에 피지배계급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부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정부(Politike arche)’라는 중심개념을 설정하고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전제적 지배가 중심이 되는 정부(despotike arche)’를 설정한다. 전제적 정부와는 상반되게 시민정부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존재하는데, 이러한 평등은 치자와 피치자의 교대에서 연유한다. 즉 정권의 교체라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핵심은 분명히 치자이든 아니면 정권교체에 의해 피치자로 전락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시민계급 내에서 이러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피치자로 전락한 시민은 그들의 권리행사를 통해 언젠가는 다시 치자로 나설 수 있지만 시민이 아닌 경우 영원한 피치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시민의 권리란 헌법, 그 중에서도 특히 공법적 차원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³²⁾

사상적 차원이 아닌 역사적 차원에서 시민을 분석하자면, 고대사회에 있어서의 시민이란 토지소유자와 전사들을 의미했고 이들의 생활방식은 고대 그리스의 귀족계급의 규범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상업이라든지 교역은 비시민계급(노예, 포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시민계급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제적 삶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민계급은 수공업을 경시했으며 시민이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했다. 따라서 고대사회에 있어서의 시민이란 전체 인구의 지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했다.³³⁾

2. 로마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

라틴어로 키비스 로마누스(Civis Romanus) 역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도시국가’ 내에서 사는 사람(Burgarius)을 의미했다. 로마법과 도시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시민법은 원래 동

31) Ibid., p.673 ff.

32) Döhn, Lothar, “Bürgertum-Bürgerliche Gesellschaft,” in : Mickel, W. (Hrsg.), *Handlexikon zur Politikwissenschaft*, Bonn 1986, pp.47-55, 여기에서는 p.49.

33) Ehrenberger, Victor : *Der Staat der Griechen*, 2. Aufl., Bd. I, Leipzig 1957, p.24.

일한 것이었고 시민법이란 시민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의미했다. 로마법에 의해 인간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먼저 스타투스 리버타티스(Status libertatis) 즉 얼마만큼 자유로운가에 의해 자유와 노예를 구분했고, 두 번째로 스타투스 키비타티스(status civitatis) 즉 자유인은 다시 시민과 비(非)시민으로 구분됐다. 세 번째로 스타투스 파밀리아스(status familias) 즉 시민은 다시 가족 내의 위치로부터 파터 파밀리아스(pater familias : 가장)와 필리우스 파밀리아스(filius familias : 식솔)로 구분되었다.³⁴⁾

위의 구분에 의하면 라틴어로 시민을 뜻하는 키비스 로마누스(civis romanus)는 이론적으로 자유인 중 시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전부를 지칭했으나 실제로는 가장(Pater Familias)만이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 가장에게 종속된 이들은 공적인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나 사적인 부문에서는 가부장의 권력하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아들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부(富)는 그 자신에게나 그가 만든 가족에게 속하지 않고 가장이 이끄는 가족 전체에게 속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로마적 시민사회는 고대 시민공동체의 모델로 볼 수 있다.

로마 시민개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개념과의 공통점은 바로 시민이라는 개념과 권리라는 개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나타난 시민의 개념보다 진일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로마시대부터 사회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 계급과 집단 권리요구의 대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집단적 차원의 요구는 가족개념이 어느 정도 해체되기 시작한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집단적 혹은 계급적 차원의 권리요구는 집단 내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³⁵⁾

당시 날로 증가하는 교역의 결과 로마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시민이 될 수 없었다.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법은 곧 시민법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로마에서 집단적 차원의 권리요구가 대두되자 외국인들 역시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원전 3세기경 시민법 이외에 외국인법이 따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시민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법이 제국시민법으로 바뀌어갔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34) Mommsen, Theodor, *Römisches Staatsrecht*, Bd.3, Leipzig 1888, p.3 ff.

35) Wieacker, Franz, *Recht und Gesellschaft in der Spätsntike*, Stuttgart 1964, p.10 ff.

3. 중세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의 개념

중세시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시민의 개념이 변화된 계기는 시민 공동체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 11세기부터 농촌사회는 점차적으로 자유로운 남자들의 동지적 결합체의 성격을 지닌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도시의 형성과 시민개념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스적 개념의 시민이나 로마적 개념인 키비스 로마누스(civis Romanus)는 원칙적으로 지주들, 즉 비(非)시민(예를 들어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사는 사람들만을 의미했으나, 중세시대에는 도시의 형성과정을 통해 이러한 시민의 개념이 확대,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 이들의 노동은 권리로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전례없이 장려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시민이 되었다고 해도 이들이 과거의 지주와 같은 ‘특권계층’이 누리던 ‘시민의 권리’를 모두 누렸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까지만 해도 고대적 의미의 시민들만이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공업자나 상인들은 이름뿐인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했다. 실제 북유럽을 포함해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기사와 ‘권리 없이 이름뿐인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기사계급과 시민계급의 공통점은 귀족계급의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경제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시민의 개념이 도시마다 매우 다양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의 권리를 갖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시민이란 도시에서 집과 토지를 소유한, 그것도 봉토를 소유한 계급만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마지막 시기에는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비교적 동일한 성분의 사회적 계급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에 시민계급이 독자적인 사회적 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사계급과 농민의 중간에 존재하는 ‘중간계급’으로서 이들의 지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중간계급으로의 대두는 근대에 있어 시민계급의 확대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³⁶⁾

이렇듯 중세까지의 시민의 개념은 ‘권리’라는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민의 개념은 ‘특권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간계급’의 형성이라는 차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전개되는 근대사회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시민개념의 핵심인 ‘권리(權利),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이라는 단어로부터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 근대의 많은 사상들이 이러한 ‘시민사회’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비록 근대 초기와 중기까지 시민계급과 시민사회가 형성

36) Brunner, Otto, *Land und Herrschaft*, 5. Aufl., Wien 1965, pp.349 ff.

되지는 않았지만 사상적 논쟁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사상에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중세까지의 시민개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개인 혹은 집단간의 권리의 상충관계,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익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근대에서 시민계급의 출현은 사상사적 발전보다 시대적으로 더디게 발생했으므로, 근대 이후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발전은 사상사적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음 장에서는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사회의 개념을 사상사적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I.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천 - 사상사적 고찰

1. 헤겔에 있어서의 시민사회

헤겔은 시민사회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사상가이다. 헤겔은 정치적 결사체인 국가와 사적 결합체인 시민사회라는 대립적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헤겔은 가족으로부터 시민사회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을 단계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개념

헤겔은 가족을 인간의 가장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결합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하나의 자주적이고 실체적인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³⁷⁾ 가족의 실체성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파악되어질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란 부부, 재산, 자녀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이 외부적·표면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 즉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과,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자신들의 가족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자아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사유재산의 축적과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가족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결사체에 명백한 실체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족 내부에서 구성원간에 발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로간의 배려는 가족 구성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가족구성의 세 가지 요소 즉 부부, 재산,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통해 가족이라는 인간의 결합체는 하나의 윤리적 단위(Sittliche Einheit)로 파악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단위는 곧 법적 의미를 띠게 되어 부부, 사유재산, 부모의 양육권은 법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³⁸⁾

가족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와해되는데, 이러한 와해를 통해 또 다른 가족이 탄생하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부조와 부모의 양육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자녀의 교육, 즉 가족에게 실체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통해 자녀가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 가족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의 구성요소에 의해 실체로서의 의미를 획득함과 동시에 이에 의해 와해된다고 볼 수 있다. 헤겔은 이러한 가족의 탄생과 와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탄생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⁹⁾

37)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Grundlinie der Philosophie des Rechts*, Frankfurt am Main 1993 § 189A.

38) Hegel, *Grundlinie der Philosophie des Rechts*, Frankfurt am Main 1993 § 158- § 181.

39) Hegel, *Ibid.*, § 181.

(2) 시민사회

헤겔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가족의 와해에 의해 생성된 복수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시민사회는 가족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원칙에 의해 지배되며 더 이상 자연적인 인간들의 결사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가족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개인적인 욕구는 가정의 부양에 의해 해결되지만 복수의 가족이 모여서 형성된 시민사회에서의 개별 가족의 욕구는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간의 경쟁에 의해 충족되어 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욕구충족을 위한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노동(Arbeit)’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적인 종속(Gegen-seitige Arbeit)을 통해 욕구의 체계(System der Bedürfnisse)가 형성된다.⁴⁰⁾

“(한 체계 내에서 : 필자 주)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알리고, 또 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 노동하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본인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까지 (부분적으로 : 필자 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욕구의 체계이다.”⁴¹⁾

헤겔은 이러한 ‘욕구의 체계’를 바로 시민사회의 특성이라고 보았고 시민사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러한 욕구의 충족에 있다고 정의한다. 헤겔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그의 수제자(Echter Schuler)라고 일컬어지는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에 의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3) 슈타인 사상에 있어서 공동체(Gemeinschaft)와 사회(Gesellschaft)

① 자아(Persönlichkeit)의 개념

슈타인의 사회국가사상과 그에서 연유하는 행정사상은 자아(Persönlichkeit)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페르소날리히카이트(Persönlichkeit)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됨, 인격, 인물, 개성, 개인, 품채”인데 슈타인의 철학에 있어서의 페르소날리히카이트의 개념은 ‘자아’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전문용어의 완전한 번역이 때로는 불가능하듯이, 이 페르소날리히카이트의 의미 역시 ‘자아’라는 한 단어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슈타인의 사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질 수 있는 문맥상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슈타인(Lorenz von Stein)은 자아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인간 개인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결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결권은 ‘자유’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슈타인은 자아의 이상실현이라고 표현한

40) Hegel, *Ibid.*, § 190- § 195.

41) Hegel, *Ibid.*, § 188.

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인간의 자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이것의 행사를 통해 자아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⁴²⁾ 이때 평등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데, 슈타인이 말하는 평등이란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슈타인에 있어서 인간 개개인의 자아가 완성된 상태, 다시 말해서 개인적 자아의 이상이 실현된 상태란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 인간 개개인이 그들의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소유(Besitz)’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슈타인은 “‘소유’는 추상적인 개념인 ‘자유’가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된 하나의 양태”라고 정의한다.⁴³⁾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자아의 이상 실현은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자결권이 보장되어야만 하는데, 그 자결권은 ‘자유(Freiheit)’의 보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소유’라는 것은 이러한 ‘자유’가 현실세계에서 구현된 하나의 구체적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삶의 목표는 모든 정신적·물질적 재화의 획득과 이에 대한 소유로 집중된다.⁴⁴⁾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획득은 재화의 생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슈타인은 재화를 자아의 이상이 가득 찬 형태, 즉 자아가 응집된 형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재화는 당연히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노동은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자아의 이상(理想)이 응집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은 “자유로운 상태의 확인”이라는 것이다.⁴⁵⁾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삶의 목표가 재화의 생산과 이를 통한 재화의 획득에 있다면 삶이란 바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의 삶과 자아의 완성이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자아의 완성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 인간 개개인이 그들의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래서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정신적·물질적 재화획득이 필수적이라면 이는 인간 능력의 유한성과 배치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여기서의 모순이란 바로 인간욕구의 무한성과 인간 능력의 시간적·공간적 유한성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을 의미한다.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적·공간적인 유한성 때문

42) von Stein, Lorenz, “Der Begriff der Arbeit und die Principien des Arbeitslohnens in ihrem Verhältnisse zum Socialismus und Communismus,” in :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3.3 Jg., Tübingen, 1846, p.237.

43) von Stein, Lorenz, *Der Socialismus und Communismus des heutigen Frankreichs. Ein Beitrag zur Zeitgeschichte, zweite umgearbeitete und sehr vermehrte Ausgabe*, Leipzig 1848, pp.24-41.

44) von Stein, Lorenz, *Die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 Band. Der Begriff der Gesellschaft und die soziale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bis zum Jahr 1830*(unveränderte photo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p.13.

45) von Stein, Lorenz, *Ideen zur Geschichte der Arbeit*, in : *Deutschland Vierteljahresschrift*, Erstes Heft, Erste Antheilung Nr. 45, Stuttgart/Tübingen 1849, p.358.

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를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모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슈타인의 공동체(Gemein-schaft) 개념은 이 모순에서부터 비롯된다.

② 공동체(Gemeinschaft)의 개념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동’ 또는 ‘공동체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번역상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제란 다른 아닌 ‘공동체사회’라는 단어 자체의 모순이다. ‘공동체사회’라는 번역은 ‘Gemeinschaft’가 공통이라는 형용사 ‘gemein’과 명사형 어미 ‘schaft’를 묶은 단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사회’라는 용어로 번역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이라는 단어와 공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 ‘사회’라는 용어를 혼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슈타인은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인간 능력의 시간적·공간적 유한성에서 파생되는 모순은 무제한의 인간들이 하나의 집합상태를 이룸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⁴⁷⁾ 하지만 인간 개개인이 아무런 연관의식 없이 단순히 모여있는 상태라면, 이는 가난의 집단화만을 의미할 뿐 앞서 언급한 모순을 제거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슈타인이 의미하는 인간들의 집합체란 인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Füreinander-erstehen)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이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다시 말해서 “개인이 전체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면 인간 개개인의 시간적·공간적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집합체를 ‘공동체’라고 정의한다.⁴⁸⁾ 이러한 집합체 내에서의 인간 개개인의 노동은 스스로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생산의 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각 개인의 자아의 근본적 속성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고가 존재한다.

한 집단 내에서의 각 개인의 노동은 다양해야 하고 실제로 인간 개개인의 능력차이에 의해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노동의 다양성에 의해서만 집단 구성원의 자아완성이 실현될 수 있다.⁴⁹⁾ 즉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인간들은 다양한 재화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46) von Stein, Lorenz, *Die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 Band. Der Begriff der Gesellschaft und die soziale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bis zum Jahr 1830*(unveränderte photo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p.14.

47) von Stein, Lorenz, *Der Socialismus und Communismus des heutigen Frankreichs. Ein Beitrag zur Zeitgeschichte, zweite umgearbeitete und sehr vermehrte Ausgabe*, Leipzig 1848, p.23.

48) von Stein, *Ibid.*, p.24

49) von Stein, *Ibid.*, p.23.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욕구의 무한성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타인 노동의 필요는 인간집단 내에서 또 다른 양태를 표출시키게 된다. 이 양태란 바로 구성원간의 상호 종속성이다. 한 개인은 인간 개인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한된 재화만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개인이 생산해내는 재화가 그 집단 내에서 갖는 의미, 즉 중요성에 따라 개인이 집단 내에서 갖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집단 내에서 하나의 위계질서가 성립하게 된다.⁵⁰⁾ 한 개인이 생산해 내는 재화가 집단 내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그 개인이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갖는 의미는 매우 비중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타인이 생산해 낸 재화 역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자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아의 완성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속성상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의 분업화는 재화의 위계질서를 창출하고 이것은 다시 노동의 위계질서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인간들의 위계질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⁵¹⁾

이러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 집단 내부에서 개개인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는 분명히 자아의 일부이고 이들의 노동에 의해 교환될 수 있는 재화 역시 이의 일부로 취급되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들이 생산한 재화나 획득한 재화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각 개인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각 개인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인정은 바로 재산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⁵²⁾

슈타인은 이 재산권에 의해 공동체 내의 인간이 비로소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권리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이란 재산권이 인간 개개인을 그 집단 내의 위계질서에 보다 확실히 편입시킨다는 사실이다. 즉 재산의 신성함이라는 특성에 의해,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재산권이라는 권리에 의해 개인은 타인의 고유영역을 넘볼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공존 또는 공유의 의미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공동체는 점차 그 고유한 속성, 즉 구성원 서로를 위한 노동과 이의 유지를 위한 공동체적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위계질서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는 인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변화란 재산축적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노동의 종류와 그것이 집단 속에서 갖는 의미에 따라 자아의 완성도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차이는 신성 불가침이라는 의미와 축적의 의미를 동

50) von Stein, *Ibid.*, p.28.

51) von Stein, *Ibid.*, p.29.

52) von Stein Lorenz, *Die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 Band. Der Begriff der Gesellschaft und die soziale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bis zum Jahr 1830*(unveränderte photo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p.18.

시에 내포하는 재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해지게 된다.⁵³⁾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본격적으로 재화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들 재화의 운동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⁵⁴⁾

③ (시민)사회(Gesellschaft)

앞서 언급했던 자아의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집단 내의 위계질서가 성립되면 여기에서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

공동체에서 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재산과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면, 이러한 축적된 재산에 의해 기존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있던 상호의존적 성격의 종속관계가 타파되고 다른 형태의 종속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즉 재화의 축적 정도가 상당부분 진행되면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독점현상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러한 원료의 독점현상에 의해 공동체 내에서는 ‘무산자(Nichtbesitzende)’와 ‘유산자(Besitzende)’ 계급이 형성되며, ‘가지지 못한 자’의 ‘가진 자’에 대한 절대복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자아의 발전정도를 지배하게 되고, 이러한 지배는 곧 ‘가진 자’에 의한 ‘가지지 못한 자’의 완전한 지배를 의미하게 된다. ‘가진자’들의 계속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산자 계급의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⁵⁵⁾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개인의 집단 내에서의 위치가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하자면 각 개인의 자아의 발전정도를 규제하고 있는 위계질서의 변동이 가능해서 그 개인 혹은 그 개인의 후손에게 새로운 자아의 발전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슈타인은 이 문제를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을 도입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 개념이 바로 가족이다.

슈타인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무는 사유재산에 의해 가능해 지는데, 이는 사유재산이 축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적된 재산은 개인 스스로에게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과 양은 그들의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의 비중에 비례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과 양은 그들 아버지의 자아발전 정도에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자녀들의 자아발전 정도는 아버지의 자아발전 정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자아발전과 재산축적의 함수관계에서

53) von Stein, *Ibid.*, p.21.

54) von Stein, *Ibid.*, p.22.

55) von Stein, *Ibid.*, p.25 ff.

생각해 볼 때 아버지에 의해 상속되는 재산은 그 자녀의 대(代)에서도 역시 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자녀들 역시 그들이 받은 교육 정도만큼의 재산축적,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자아만큼의 재산 정도밖에 축적할 수 없게 되어 그들의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도 역시 그들이 받은 만큼의 교육만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재산의 정도에 의해 교육의 질과 양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아의 발전정도 역시 아버지의 재산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자신의 노동의 중요도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 위치 역시 아버지의 그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⁵⁶⁾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줄 재산은 곧 전체 재화량에 대한 그들의 소유분이다. 이 소유분은 다시 그들 개인의 공동체(Gemeinschaft) 내에서의 위치와 가치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은 공동체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영속화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⁵⁷⁾

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질서, 즉 개개인이 차지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바꿀 수 없을 때 공동체가 사회(Gesellschaft)로 이행되어졌다고 본다.

사회(Gesellschaft)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집단 내의 모든 개인을 하나의 엄정한, 그리고 영속적인 위계질서에 편입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체제 내에서 가장 먼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은 절대적 종속관계의 심화이다.

우리는 앞서 자아의 완성은 인간의 모든 욕구와 바램이 충족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는 이러한 욕구 충족의 차원에서 좀더 적나라한 행태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타인의 노동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의 욕구의 충족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정할 경우 슈타인의 표현처럼 “욕구충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유재산의 축적정도는 그에 종속된 하인(Dienerschaft)의 숫자에 비례하게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사회 내에서 충분히 발견되고 있고 피종속자들의 자아발전 정도는 지배자의 그것보다 더욱 차이 나게 된다.⁵⁸⁾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사회 내부에서는 타인을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종속시키려는 현

56) von Stein, Lorenz, *Der Socialismus und Communismus des heutigen Frankreichs. Ein Beitrag zur Zeitgeschichte, zweite umgearbeitete und sehr vermehrte Ausgabe*, Leipzig 1848, p.31 f.

57) von Stein, Lorenz, *Die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I. Band.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der Socialismus und Communismus Frankreichs von 1830 bis 1848(unveränderte photo- 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p.29.

58) von Stein, *Ibid.*, p.40 f.

상과, 또 자기 자신만은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로 남으려고 하는 역동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것을 슈타인은 ‘이익(Interesse)’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이익’이 사회의 역동성의 원리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슈타인은 가진 자가 보다 많은 노동력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하고 이와는 반대로 피종속자는 그 종속상태를 타파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의 역동성은 ‘이익갈등’의 한 형태이며, 모든 사회적 갈등은 이익갈등에서 파생된다고 보았다.⁵⁹⁾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이다. 그러한 이익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간에 중요한 점은 개개인의 이익갈등이 곧 사회(헤겔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동력이라는 것이다. 물론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개념은 자기 해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서구의 자율적 시민사회의 확대발전을 통해 부정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헤겔 혹은 헤겔주의자의 시민사회의 개념이 부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헤겔과 헤겔주의에 서의 시민사회의 속성이 이익의 갈등에 있다는 점이다.

2. 맑스(Marx)와 그람시(Gramsci)에 있어서의 시민사회

맑스는 헤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사상가 중 한 명이다.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슈타인과 같이 헤겔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 발전시킨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맑스와 같이 헤겔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맑스의 시민사회 개념은 기본적으로 헤겔의 국가개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상당부분 수용했다. 맑스는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개인간의 갈등과 대립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시민사회의 핵(Kern)에는 바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간의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슈타인과 헤겔에서 보여지듯이 개개인의 이익갈등이 사회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맑스가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헤겔의 국가개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맑스는 초기 시민사회를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인 존재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과 같은 정치혁명이란,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정치적 해방이란 사회가 정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헤겔 이후 독일 철학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정치의 국가적 영역에 속하는 존재이다. 국민의 평등한 자아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이용하여 약

59) von Stein, *Ibid.*, p.42.

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로부터 사회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방을 통해 정치적으로 억압되었던 시민사회의 이기주의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⁰⁾ 이런 차원에서 맑스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체제와 길드 내에서의 개인들의 관계가 대부분 특권에 의존했던 반면 근대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의 관계는 법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관계나 정치적 유형들은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생활의 물질적 조건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맑스의 시민사회는 대부분 물질적 관계에 의해 파악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헤겔과 마찬가지로 노동, 사적 소유, 그리고 이기적인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며 시민사회의 변성은 곧 이기적인 개인들의 자유와 자율에 기반을 둔 경제관계의 보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¹⁾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맑스가 시민사회의 핵(Kern)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러한 갈등과 경쟁은 생산관계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즉 개개인의 갈등과 경쟁관계가 생산관계로 환원되면서 개개인의 갈등과 경쟁은 ‘집단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집단화’된 개개인의 이익은 계급이라는 형태로 투영되는데, 이러한 계급이라는 ‘집단적 존재’가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이다.

개개인 문제의 ‘집단화’는 그 이후의 사상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대표적인 이가 그람시이다. 그람시는 우선 특정 사회에 존재하는 제도와 관습은 상당한 시일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물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람시는 시민사회에서 작용하는 ‘헤게모니’는 맑스나 헤겔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국가 공권력을 통한 강제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도덕적 차원 혹은 문화적 차원의 지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지도력이란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닌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시민사회의 시민, 즉 부르주아가 권력을 획득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국가 공권력을 획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의 지도력을 획득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왜 부르주아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역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람시의 사상에서도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익갈등에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0) Marx, Karl, “On the jewish Question,” in : *Marx-Engels Collected Works*, New York 1975, pp.165-167.

61) *Marx-Engels Collected Works*, Vol.29, p.262.

결국 시민이라는 개념과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모두 이익에 기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라는 하나의 특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한 ‘특권’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시민이라는 개념은 권리차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지배적 견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결국 권리는 이익이라는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민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이러한 이익간의 상충관계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 역시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익이 개인적 차원의 이익이나 아니면 집단적 차원의 이익이나 하는 문제이다. 개인적 차원의 이익과 집단적 차원의 이익을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이익과 집단적 차원의 이익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은 앞서 언급한 맑스의 이론에 잘 나타나 있듯이 사회구조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이익이 집단적 차원의 이익으로 환원되기도 하고 역으로 집단적 차원의 이익이 개인적 차원의 이익으로 변화되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론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집단적 이익을 주장할 때와 개인적 이익을 주장할 때 이익추구의 방법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상의 차이가 사회운동, 그리고 신사회운동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익주장의 다양한 방법론, 즉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에 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IV. 사회운동

1. 사회운동의 개념

(1) ‘운동’의 어원(語源)적 고찰

운동(movement, 독어 Bewegung)이라는 단어는 고대사회에서 정치적 변화와 천체의 변화간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연관관계를 의미했다.⁶²⁾ 그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운동(movement)이라는 단어는 혼란(Chaos)이라는 단어와 동일시되었고 정치나 사회와는 무관한 용어로 머물렀다. 이러한 운동이라는 용어가 비로소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일이다. 프랑스혁명은 ‘운동’이라는 단어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전환점이었는데, 당시에 이르러 ‘운동’이라는 용어는 비로소 ‘반동’ 또는 ‘혁명’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어졌다.⁶³⁾ 이러한 정치적 의미성의 획득 이외에도 프랑스 혁명은 ‘운동’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실존하는 사회적 존재, 즉 뚜렷한 목적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운동을 합리적 목적성(Zielrationalität)과 지속성(Dauerhaftigkeit)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인데, 이것은 오늘날 사회운동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오늘날 정의하는 사회운동,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근·현대적 사회운동(modernen soziale Bewegung)의 시작으로 보는 근거가 되고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에 와서야 ‘운동’은 비로소 ‘사회(socius)’와 의미적 결합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사회운동의 정의

사회운동(modernen soziale Bewegung)의 올바른 개념 정립은 전근대적 사회운동과(vor-modernen soziale Bewegung)의 대비를 통해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과거에도 분명 사회 구성원간의 집단적인 행위는 존재해왔다. 유럽사회에서 전근대적 사회운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칠리안 운동(Chilianistische Bewegung)⁶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운동을

62) 이를 Eckart Pankoke같은 이들은 사회 운동적 의미를 포함하는, 원시적 형태의 어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Pankoke, Eckart, *Soziale Bewegung-Sociale Frage-Sociale Politik*, Stuttgart 1970, p.19. 참조.

63) *Ibid.*, p.20.

64) Chilianistische Bewegung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근대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 운동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투쟁과 노력에의 한 목적 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올 메시아의 구원에 의한 기적만을 바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사회운동이 가져야 할 합리적 목적성

비롯해서 모든 전근대적 사회운동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반면 대부분의 근·현대적 사회운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현대적 사회운동이 합리적 목적성(Zielrationalität)과 지속성(Dauerhaftigkeit), 그리고 방법론상의 합리성(Handlungsrationalität)을 고유의 특성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목적성과 방법론상의 합리성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합리적 목적성이란 현존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파악분석하고 이를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Strategie)을 통해 실제 사회에 전달·적용하는 근·현대적 사회운동의 측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법론상의 합리성이란 의도적인 동원을 통해 사회운동의 물량적 힘을 축적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⁶⁵⁾ 여기에 준거하여 라쉬케(Raschke)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19세기 독일의 노동운동이 결코 독일에 있어서 최초의 사회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운동보다 19세기 초반의 독일 시민운동(Bürgerliche Bewegung)을 첫 번째 사회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최초의 근·현대적인 사회운동은 그 운동의 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에, 즉 사회운동의 물량적 힘이 매우 나약한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최초의 사회운동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역시 독일의 노동운동은 최초의 근대적 대중사회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근 현대의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라쉬케는 근현대적 사회운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사회운동이란 고도의 상징적 통합, 그리고 여기에 기인한 지속성과 여러 종류의 하부조직을 통한 역할분담을 특징으로 하고,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즉 사회적 변화를 이루려거나, 혹은 때에 따라 (지배계급에 의한) 사회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으로 인원이 동원된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⁶⁶⁾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지속성’, ‘방법론상의 합리성(의식적인 인원동원)’, 그리고 ‘합리적 목적성’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도의 상징적 통합(hohe symbolisierende Integration)’이다. ‘고도의 상징적 통합’이란 사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의식(Wir-Gefühl)’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의 참여자는 ‘우리 의식’을 통해 목적추구의 과정 속에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말처럼 ‘적’과 ‘동지’의 구분이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n)’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라면 이를 통해 사회운동은 비로소 그 정치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⁶⁷⁾

(Zielrationalität)은 결여되어 있고, 이 합리적 목적성(Zielrationalität)의 결여는 운동의 지속성을 상실케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Joachim Raschke, *Soziale Bewegungen. Ein historisch-systematischer Grundriß*, Frankfurt am Main/New York 1988, p.81. 참조.

65) Joachim Raschke, *Soziale Bewegungen*, p.80 f.

66) 위의 책, p.77

67) Carl Schmitt, *Der Begriff des Politischen*, Berlin 1963, p.12.

라쉬케와 같이 정치이론적 입장에서 사회운동을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면 사회학적 입장에서 구겐베르거(Guggenberger)는 “이탈하기 쉽고 응집력이 떨어지는 대중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치적 결사체의 정치적 영향력, 이 양자 간의 함수관계에 의해 지속성의 정도와 조직 차원에서의 결속력의 정도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되어질 수 있는 집단적인 행위가 바로 사회운동이다” 라고 정의한다.⁶⁸⁾ 구겐베르거는 라쉬케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 집단적인 ‘우리 의식’.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과 행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운동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준다.

ii) 하나의 집단행동 내부에는 매우 광범위한 가치와 사고방식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하나의 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 발전하려면 이러한 다양성을 통합, 나름의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 하나의 집단적 표현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iii) 사회운동은 신사회운동에 비해 조직과 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우발적이기 쉬운 대중과 사회운동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조직과 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⁶⁹⁾

사회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와는 달리 맑시스트(Marxist)적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람슈테트(Rammstedt)는 사회운동을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항하는 의식적 저항행위 (Prozeß des Protest gegen bestehende soziale Verhältnisse)”라고 규정한다.⁷⁰⁾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의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라쉬케의 정의를 살펴보자. 사회운동에 관한 그의 정의는 역사학과 사회학이 사회운동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광범하게 하고 있고 사회운동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정의는 사회운동 그 자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 분야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정의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라쉬케는 그의 사회운동에 관한 정의 속에서 사회운동의 물량적 기초, 즉 사회운동의 대중성에 관한 문제를 지나치게 약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의 정의에 따르면 대중성을 띤 사회운동과 엘리트들간의 운동(Eliten Bewegung)의 구분이 힘들어진다.

구겐베르거의 사회학적 정의는 정치적 결사체 혹은 정치적 단체들과의 연관선상에서 사회운동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기반을 둔 정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68) Bernd Guggenberger, “Soziale Bewegung,” in : *Staatslexikon*, 7. Aufl., 4. Bd., Freiburg/Basel/Wien 1988, pp.1227-1229, hier : p.1227.

69) *Ibid.*, p.1228.

70) Ottheim, Rammstedt, *Soziale Bewegung*, Frankfurt am Main 1978, p.130.

근대 사회에 나타났던 여러 종류의 사회운동들을 그가 정의한 사회운동의 틀 속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게된다.

람스테트의 정의는 저항(Protest)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운동이 사회적 존재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운동과 일시적인 저항운동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사회운동을 사회적인 객관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고(本稿)에서는 사회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운동이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의도적 변화를 막아 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인간들의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의 특징은 합리적 목적성과 방법론상의 합리성에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사회운동은 비로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지속성과 운동의 통합성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사회운동의 목적인 사회적 변화 혹은 이의 저지를 달성할 수 있다.」

2. 사회운동의 발생원인

사회운동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면 이제는 사회운동이 어떠한 상황과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간의 집단행동으로서 사회운동이 한 사회의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상황(Mangelhafte Situation)에서 비롯된다고 본다.⁷¹⁾ 다시 말해서 사회운동의 발생은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⁷²⁾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인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즉 사회적 문제가 항상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에는 종교적인 동기에서 출발하여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만을 기다리는 원시적 형태의 우발적 집단 행동만이 존재했을 뿐, 앞서 정의한 개념에 들어맞는 사회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의 맹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맹점은 사회적 불만요소나 사회적 문제점들만이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면 사회운동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던 유럽 사회운동의 대표적 이론가 라쉬케는 사회운동의 발생여건이 한 사회

71) Bernd Guggenberger, *Soziale Bewegung*, p.1228.

72) Jürgen Nowak, *Soziale Probleme und soziale Bewegungen. Eine praxisorientierte Einführung*, Weinheim/Basel 1988, p.14.

의 근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사회운동이 근대화의 본격적 진행기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부터 정치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적 근대화(Soziale Modernisierung)가 사회운동의 발생을 위한 여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쉬케에 따르면 사회운동이란 사회적 발전과정(Gesellschaftliche Entwicklung)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극대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 예를 들어 리터(Gerhard A. Ritter), 하인만(Edward Heinmann)과 같은 이들은 대체적으로 라쉬케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근대화 과정이 사회운동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⁷³⁾

(1) 사회적 동원과 근대화

이미 언급한대로 사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법론상의 합리성, 즉 사회 구성원의 (목적의식에 따른) 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동원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사회 구성원간에 형성되었던 과거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화 형태와 새로운 행동양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존관계의 해체와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관계가 사회적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환경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⁷⁴⁾

(2) 문화적 근대화 과정

여기서 문화적 근대화 과정이란 합리화 과정, 조직의 현대화, 교육의 보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1)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

이는 인간 상호간에 그들의 불만을 교환할 수 있는 촘촘한 커뮤니케이션 그물망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고립되어 있었던 소규모 그룹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로 말미암아 상호간에 불만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의식의 체계화·집단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도시화 과정까지 가세하게 되면 이들 사이의 의견교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⁷⁵⁾

73) Joachim Raschke, *Soziale Bewegungen*, p.84.

74) *Ibid.*, p.85.

75) *Ibid.*, p.86.

2)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기회의 확대는 사회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교육기회의 확대란 문맹의 퇴치를 의미하는데, 이로써 사회운동의 참여자들과 잠재적 동조자들에게 운동의 목표를 보다 정확히 제시·이해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⁷⁶⁾

3) 조직에 있어서의 근대화

조직의 근대화란 운동 참여자들이 가진 다양한 형태의 요구와 이익을 조직화·체계화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을 먼저 사회적 차원으로, 이어서 정치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기능까지 포함된다.⁷⁷⁾

4) 운동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증가

이미 언급한대로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합리성이란 이성적 차원에서 목적을 정하고 또 이성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목적성은 반드시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운동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사회운동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사회운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정의한 사회운동의 범주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⁸⁾

지금까지 사회운동의 개념과 발생여건에 대해서 논해 보았는데, 이러한 논의는 사회운동을 하나의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사회적 실체로 파악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개념 정의와 발생여건의 검증을 통해 사회운동이 사회적 의미를 갖는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사회운동이 사회적 실체로서 의미성을 획득하려면 문화의 일부 또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문화는 모든 사회적 행동양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 및 가치규범 전부와 이러한 의미들을 객관화하고 사회화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운동과 문화의 관계를 논하면서 사회운동이 사회적 실체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사회철학과 사회운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은 근대화 과정(Modernisierungsprozeß)의 산물이라고

76) Ibid.

77) Ibid., p.87.

78) Ibid., p.88.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이 정치문화의 대표적 요소 중 하나라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정치학자 베르그 술로서(Berg-Schlosser Dirk)는 갈등·문제해결 전략(Konflikt und Problemlösungsstrategie)이 정치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⁷⁹⁾ 디아스(Patrick V. Dias) 역시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다.⁸⁰⁾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사회운동이 정치문화적 갈등·문제해결 방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회운동이 문화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전통적 정치문화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1)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사회운동(social movement),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한 사회의 갈등·문제해결 방식으로서 사회운동이 정치문화의 일부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문제해결 방식 속에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가치성향(Normative Wertorientierung)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범적 가치성향이 정치문화의 구성요소인가가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파이(Lucian W. Pye)는 규범적 가치성향이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학 서적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치문화의 개념 또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 이데올로기, 가치, 정치적 감수성, 정치적 의미의 기대의식, 정치적 행위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대한 동의...”⁸¹⁾

이러한 규범적 가치성향은 사회철학에 의해 사회운동에 투영된다. 미국적 시각에서는 사회철학과 사회운동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회운동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중시하는 유럽 학계에서는 양자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19세기 사회철학(Sociale Philosophie)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사상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1878년의 저서 『국민경제론』(Die Volkswirtschaftslehre)에서 사회철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모순에서 유래하는 첫 번째 영역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 필자 주) 행동하는 사고이고, 두 번째 영역은 (그러한 사고를 : 필자 주) 실제 영역에 행동으

79) Dirk Berg-Schlosser, *Politische Kultur, Eine neue Dimension politikwissenschaftlicher Analyse*, München 1972, p.16 ff.

80) Patrick V. Dias, “Der Begriff ‘Politische Kultur’ in der Politikwissenschaft,” in : Dieter Oberdörfer(Edd.), *Systemtheorie, Systemanalyse und Entwicklungsländerforschung*, Berlin 1971, pp.409-448, hier : p.409.

81) Lucian W. Pye, “Political Culture,” i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1968, pp.218-224, hier : p.218.

로 옮기는 것이다. 첫 번째 영역으로부터 사회철학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영역으로부터 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다.”⁸²⁾

슈타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운동을 자본과 노동에서 파생되는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고적 노력, 즉 사회철학의 ‘실제적 행위’ 양태로 파악하고 있다. 슈타인의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에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쉬케 역시 19세기 당시의 슈타인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라쉬케는 사회철학의 사회운동에 대한 역할을 ‘지도(Landkarte/map)’에 비유하고 있다. 그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여 사회운동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면, 사회철학은 사회운동의 목적적 방향성(Orientierung), 미래상(Zukünftige Zustand), 그리고 사회철학이 담고 있는 사상적 이상이 실현되지 못했을 경우의 상태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⁸³⁾ 이는 사회운동의 프로그램이 사회철학이라는 조감도 아래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철학은 사회운동의 프로그램보다 상위개념임을 추론할 수 있다.⁸⁴⁾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사회철학이 정치문화의 대표적 요소인 규범적 가치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사회철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쉘즈(E. Shils)는 이데올로기를 “인간, 사회,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도덕론적인 포괄적인 신념체계”⁸⁵⁾라고 정의하고, 사회철학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인식론적으로 체계화한, 행동지향적인 사상의 틀”⁸⁶⁾로 정의하는데, 양자가 이런 관계라면 사회철학은 이데올로기의 하위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위개념인 이데올로기가 “다른 신념체계(belief system)와 비교해서 고도로 통합·체계화된 가치체계”⁸⁷⁾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것의 하위개념인 사회철학도 일정한 사회적 가치체계와 규범적 가치성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⁸⁸⁾

이로써 사회철학은 가치성향과 가치체계의 반영을 통해 사회운동에게 문화적 성격을 부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철학이 사회운동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철학이 사회운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82) Lorenz von Stein, *Die Volkswirtschaftslehre*, 2. Aufl., Wien 1878, p.533.

83) Joachim Raschke, *Soziale Bewegungen*, p.165.

84) *Ibid.*, p.165.

85) Edward Shil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ie,” i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1964, pp.66-76, hier : p.66.

86) Paul E. Sigmund, *The Ideologies of the Developing Nations*, New York/ London, 1963, p.3.

87) Edward Shil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ie*, p.66 ff.

88) Peter Koslowski, “Sozialphilosophie,” in : *Staatslexikon*, 7. Aufl., 5. Bd., Freiburg 1989, pp.34-41, 여기서는 pp.34-37.

(2)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사회철학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철학은 사회운동에 있어서 정치문화적 성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도(map)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철학이 사회운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복합적 성격을 띤 사회운동은 여러 종류의 사회적 모순들을 동시에 소화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의 사회운동에 가담하는 참여자의 대다수는 단순 참여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단순 참여자는 그들의 불만요인, 즉 그들을 불만족스럽게 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 또는 요소를 어떻게 변화·제거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이때 사회철학은 그들을 억압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제시·설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불만의 원인을 단순·명료화시키는 사회철학의 기능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에게 더욱 뚜렷한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 뚜렷한 동기의식은 불만을 더욱 확대재생산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회운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철학이 인적 동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비록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더라도 여러 종류의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운동에 목적성과 방향성, 그리고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사회철학에 따라 사회운동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운동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철학의 종류에 따라, 즉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순수 맑시즘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의 목적에서부터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철학이 사회운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⁸⁹⁾

넷째, 사회 철학은 하나의 사회운동 내부에서 참여자들의 통합과 결속력 향상에 기여한다.⁹⁰⁾

사회철학이 사회운동 내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회철학, 즉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이론들이 운동의 이데올로기(Bewegungsideologie)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철학이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의 사회철학이 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89) Joachim Raschke, *Soziale Bewegungen*, p.165.

90) *Ibid.*, p.166 ff.

1) 비판적 시각 : 사회적 변동을 시도하는 사회철학은 현존하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미래상의 제시 : 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철학은 현존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 제거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3) 방법론의 제시 : 사회철학은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고 난 뒤 긍정적인 사회상태가 도래하는 일이 실제적·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그 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 즉 모순제거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⁹¹⁾

요약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철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근본문제이며 그 문제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결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운동에 필수적인 양적 기반의 확보, 즉 사회 구성원을 사회운동에 참여·동원시키기 위하여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회운동이 방법론상으로 어떤 방법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넷째, 누가 그 사회의 주적(主敵)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의 근본적·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⁹²⁾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사회철학이 운동의 이데올로기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내의 사회운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사회운동의 문화적 성격,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운동과 가치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91) Michael Beckmann, *Theorie der sozialen Bewegung. Anwendung sozialpsychologischer Hypothesen zur Erklärung der Entstehungsbedingungen sozialer Bewegungen*, Diss., München 1979, p.213.

92) Joachim Raschke, *Soziale Bewegungen*, p.168 f.

(3) 사회운동과 가치체계

하나의 사회운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철학을 통하여 기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 손상되어졌다고 여겨질 때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⁹³⁾ 가치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운동을 바라본다면, 사회운동은 “자신이 가진 고유의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의 보편화된 가치체계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형태의 사회운동”⁹⁴⁾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즉 가치체계와의 연관선상에서 파악되어지는 사회운동이란 사회적으로 손상되고 있는 가치체계의 복구를 추구하는 수단이거나,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의 기저를 가치 체계에 두고 있는 집단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멜서(Smelser)는 사회운동을 “보편적·전통적인 가치체계의 표현을 통해 사회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집단적 행위”⁹⁵⁾로 간주한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사회철학이 운동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함축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물량적 기반을 유지·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운동이 가치체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은 사회운동 역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가치체계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적 변화에 의해 가치체계가 집단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면 사회운동의 형태와 성격 역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운동은 신사회운동으로 변하게 된다.

93) *Ibid.*, p.174.

94) *Ibid.*, p.88.

95) Neil J. Smelser, *Theorien des kollektiven Verhaltens*, Köln 1972, p.326.

V. 신사회운동

1. 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의 전환 - 실례를 통해본 전환과정 : 독일에서 나타난 실제적 운동사를 중심으로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된다.⁹⁶⁾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겪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회운동이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이 산업사회적 패러다임에서 후기산업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독일의 신사회운동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된다.

독일의 경우 나치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역사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나치정권이 독일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든 아니면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일탈적 과정으로 여겨지든간에, 나찌 정권이라는 역사 속의 존재가 독일의 근현대사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증거는 독일의 사회운동 역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운동의 전형적 형태인 노동운동이 강했던 국가였으나 나치정권에 의해 이러한 사회운동의 전통이 단절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⁹⁷⁾

이렇게 단절되었던 독일의 사회운동의 전통은 2차대전 종전 후 서구의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시 재개된다. 즉 히틀러 치하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각종 사회운동이 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만개하기 시작한 독일의 사회운동은 독일의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들 독일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조직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독일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자신의 조직적 취약성을 정당(政黨)과의 연계 속에서 보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당과의 연계성은 사회운동이 갖는 본래적 의미를 상실케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정당에 대한 의존은 ‘독일사회주의대학생연합(Sozialistische Deutsche Studentenbund, SDS)’이 독일 사민당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독일사회주의대학생연합’이 사민당과 결별하게 된 동기는 사민당이 반핵운동에 대한 조직차원의 지원을 교묘히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사민당과 결별한 이후 당시 독일 사회운동의 대표적 주자였던 학생운동은 독립된 조직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들 학생운동 단체들이 조직으로서의 구성력을 비교적 빠른 시

96)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 저서 “신사회운동의 개념과 특징”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97) 독일의 경우 ADAV(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 : 독일노동자연합)와 VDAV(Verband deutscher Arbeiterverein : 독일노동자총연맹)이 연합하여 1869년 세계최초의 노동자 정당인 사회민주주의 노동당(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을 창설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Grebling, Helga, *Ges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Muenchen 1976, p.92. 참조.

일 내에 갖추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추진하고 있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반핵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반핵운동은 국제적 차원의 지지를 얻으며 유럽국가들간에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전후 독일의 사회운동을 조직화·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당시 독일에 존재하던 여러 종류의 사회운동들은 서로간의 연계를 통한 조직을 구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 지역 운동인 ‘자연을 사랑하는 청소년의 모임(Naturfreundejugend)’과 교회단체의 환경모임이 연계하고, 여기에 다른 사회운동이 가세함으로써 나름의 조직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망가 중심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⁹⁸⁾

명망가 중심의 독일 사회운동은 유럽 학생운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68년도 학생운동을 고비로 점차 쇠퇴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즉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명망가 중심의 운동과 지역중심의 소규모 차원의 운동이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혼재양상은 결국 사회운동에서 신사회운동으로 전이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이기에 나타나는 양상은 이념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SDS와 반핵운동의 주요 단체 중 하나인 ‘캠페인’과의 연합을 들 수 있다. 이 두 단체는 이념적인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합해서 활동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이념성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운동 이데올로기가 운동의 방법론적, 그리고 목적론적 합리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사회운동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일의 사회운동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동 즉 신사회운동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사회적 변화에 있어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던 여타 유럽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본고가 앞서 언급했던 바 사회적 변화가 사회운동을 변화시킨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2. 신사회운동의 개념과 특징

신사회운동은 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후기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발생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대목은 산업사회 보다 후기산업사회에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즉 산업사회의 주체는 개인보다는 계급이라는 집단적 요소가 더욱 강한 반면 후기산업사회는 계급과 같은 집단적 요소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전이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우선 개인이 중심이 됨으로써 집단이라는 존재에 의해 가려졌던, 개인적 차

98) Roth, Roland, *Demokratie von Unten. Neue soziale Bewegungen auf dem Weg zur politischen Institution*, Köln, 1994, p.185.

원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익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의 이익이란 개인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추구하고 싶은 물질·정신적 재화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이익은 끊임없이 다른 개인의 이익과 갈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후기산업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왜 후기산업사회에서 개인적 이익추구가 두드러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버마스(Habermas)는 이미 1973년에 『후기자본주의에서의 정통성 문제(Le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라는 책에서, 후기자본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과거 자유방임적 경쟁체제의 부산물이었던 대량실업과 축적교란 등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교환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이러한 부작용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지만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⁹⁹⁾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충성의 약화란 개인주의의 대두를 의미하고 결국 집단주의의 약화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의 이론은 1981년 발행된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서 보다 정교해지는데,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막스 베버(Max Weber)의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후기산업사회(후기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베버와 같이 사회란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해 조정되고 규범적으로 통합되며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영역, 즉 개인의 ‘생활영역(Lebenswelt)’과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 목적성(Zielrationalität)에 의해 이끌어지고 그 근본에는 화폐와 권력이 존재하는 ‘체제(System)’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본래 이 두 영역은 각각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체제 영역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또한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같은 강제성이 증대되면서 생활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침범이란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합리성(Kommunikationsrationalität)을 합리적 목적성(Zielra-

tionalität)이 압도하여 일상 생활영역을 파괴하는 경우, 혹은 체제의 비대화가 지식생산의 제도화를 초래하여 일반인들은 이러한 제도화된 지식생산과정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개인은 결국 문화적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과거 초기 산업사회나 산업사회 중기의 경우 체제의 위기를 대부분 체제 내부에서 극복했던 반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체제의 위기가 생활영역이라는 하부구조에 전이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능상실이 물질적 재생산 영역에서 혼란을 낳고, 그러한 혼란이 체제영역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영역까지 전이·확대되어 아노미, 노이로제, 목적의식 상실 등과 같은 병리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체제의 생활영역에 대한 문제와 혼란의

99) Habermas, Jürgen,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Frankfurt am Main 1973. 참조.

전이,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체제와 생활, 이 두 영역이 병합되는 현상을 하버마스는 생활영역의 식민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신사회운동을 ‘후기산업사회의 산물’이라며 “개인 삶의 세계를 침해하는 (후기산업사회의 : 필자 주) 경향에 대한 저항(Widerstand gegen Tendenzen einer 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이라고 정의한다.¹⁰⁰⁾ 하버마스는 신사회운동을 사회운동(moderne soziale Bewegungen), 특히 19세기 노동운동과 비교하면서, “사회운동은 물질적인 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면 신사회운동(Neue soziale Bewegungen)은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재생산과정과 사회적 통합과정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¹⁰¹⁾

한편 오페(Claus Offe)는 하버마스와는 다르게 후기산업사회의 모순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혼합 혹은 융합에서 찾는다. 오페는 정치와 사회의 분야를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분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¹⁰²⁾ 먼저 낡은 패러다임 정치의 기본 유형은 독일식 사회국가(Sozial Staat) 혹은 영국식 사회복지국가(Welfarestate)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오페는 국가의 사회분야, 즉 경제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국식 사회복지국가 체계보다는 독일식 사회국가 체계를 낡은 패러다임의 주된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사회국가 체계와 영국식 사회복지국가 체계의 차이에 대해 잠시 논해야 할 것 같다. 사회국가(Sozialstaat)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법학계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정치학 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국가 체계를 ‘독일식 사회복지국가 체계(Sozialstaat)’와 ‘영국식 사회복지국가 체계(welfare state)’, 이 양자로 대별한다.¹⁰³⁾ 이러한 구분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체가 국가인가 아니면 사회적 제도와 기구(Social Institution)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독일식 사회국가체제는 국가가 경제분야에 상당정도 개입하여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꾀하는 것이고 영국식 사회복지국가 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을 볼 때 사회보장과 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독일식 사회국가 체계가 우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사회보장의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 역시 독일식 사회국가 체계를 받아들인 나라이다. 오페 자신은 ‘Welfare State’라는 용어로 복지국가 전반을 표현하고 있지만 오페의 복지국가는 영국식 개념보다는 독일식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페는 국가의 사회·경제 분야에의 개입, 그리고 이를 통한 분배구조의 개선, 마지막으로

100) Habermas, Jürgen, *Theorien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am Main 1981, p.579.

101) *Ibid.*, p 581.

102) Offe, Claus, “New Social Movement” :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4, 1985, p.817.

103) 이 부분에 대해서는 Gerhard A. Ritter, *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und England. Entstehung und Grundzüge im Vergleich*, München 1983. 참조.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민주국가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낡은 패러다임의 주된 목표였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에서의 행위주체는 전문화되고 제도화된 이익집단과 제도정치권에서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주체들은 대의제를 통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은 내부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모순이란 바로 국가재정의 폭발현상이다. 낡은 패러다임하에서 국가의 재정폭발은 필연적인데, 그 이유는 자본축적의 필요성과 복지기금축적의 필요성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높은 세금과 복지기금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정당 역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복지의 증대로 정당이 행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의지만을 강조하여 결국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쟁적 이슈를 희석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대중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⁰⁴⁾ 오페는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신사회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펴려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버마스나 오페, 양자 모두 정당의 기능상실과 물질적 재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다른 모순을 잉태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사회운동의 발생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 신사회운동은 산업사회의 가장 주도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해결보다는 삶의 질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⁰⁵⁾ 잉겔하르트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동력은 ‘물질 자본’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물질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계급, 그리고 그러한 물질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계급간의 이익갈등이 사회의 주요 모순이었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사회적 동력은 더 이상 물질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라는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형·무형의 재화가 제조업을 대신하여 경제분야의 주축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무형의 재화가 대두되는 예로는 서비스 부문의 팽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동력의 변화는 결국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사회적 관계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물질 자본을 소유한 계급, 즉 자본가 계급이 문화적 자본의 대두로 사회적 권력을 점차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물질적 풍요이다. 즉 욕구면에서 파악할 때 산업사회는 물질주의적 욕구가 대표적 욕구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질주의적 욕구는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상당부분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마르쿠세는 이미 1964년 「1차원적 인간」이라는 저서를 통해 산업사회의 풍요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라는 단어를 ‘관리’라는 용어로

104) Offe, Claus,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1984, pp.821 ff.

105) Ingelhart, Ronald, "Value, Ideology and Cognitiv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 in Western Democracies* lemd, London 1990, pp.43-66.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⁰⁶⁾ 이렇듯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탈물질적 욕구가 대두되는데, 탈물질적 욕구의 충족은 기존의 정당에 의해 대변되지 않으며 또한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 역시 이러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게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산업사회의 산물인 사회운동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운동이 하나의 운동 이데올로기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면 신사회운동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신사회운동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물질 차원의 이익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인 사회운동과는 다르게 탈물질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운동은 운동의 목적과 그에 따른 주제가 비교적 단일하고 선명한데 반하여 신사회운동은 그 목적과 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운동의 이슈도 매우 빠르게 바뀐다.

셋째, 사회운동이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신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조직이라는 개념이 미약하며, 따라서 관료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조직원과 비조직원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운동에는 운동의 지도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반면 신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조직이 미약하므로 운동지도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운동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도 비교적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운동이 의존하고 있는 행동방식은 비교적 일정한데 비해 신사회운동은 행동양태에서 매우 다양함을 보인다.

여섯째, 신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의 독자적인 신사회운동들 간의 필요에 따른 연합이 용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존재한다.¹⁰⁷⁾

일곱째, 사회운동은 집단적 이익 실현을 위해 사회전반의 변혁을 꾀하고 있는 반면 신사회운동은 어떤 이념을 통해 사회전체의 변혁을 꾀한다기보다 자신의 현재 삶의 세계를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안별로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회운동은 사회운동보다 「계몽적 요소」, 「동원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반면에 「자발성」은 사회운동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¹⁰⁸⁾

106) Marcuse, Herbert,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참조.

107) Raschke, *Soziale Bewegungen*, p.52.

108) 신율,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p.166.

여덟째, 신사회운동은 위의 이유로 인해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적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

아홉째, 사회운동이, 유럽의 정당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권력의 장악과 계급관계의 변혁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반면 신사회운동은 그렇지 않다.

열번째, 사회운동은 정치기구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정치기구에 의존하는 전략을 전개하는 반면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제도정치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제도정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변혁을 꾀하는 ‘개혁의 정치(Politics of Reform)’보다는 대중적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y)’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현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후기산업사회가 갖는 특징들, 다양하고 분화된 사회체제,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빠른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이슈의 빠른 변화 등에 의해 사회운동은 그 속성과 모습을 바꾸어 완전히 새롭게 탄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사회운동은 “산업사회의 발전론적인 패러다임의 붕괴”에 대한 대답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¹⁰⁹⁾ 신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환경운동과 평화주의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신사회운동에 있어서 좌우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으로는 그들의 특성을 조명하기 어렵다. 또한 위의 언급과 같이 신사회운동은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슈의 빠른 변화에 따라 조직의 이합집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운동의 관료화된 조직으로는 이슈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관심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과연 신사회운동은 어떻게 운동의 양적 기반인 구성원들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신사회운동이 사회운동에 비하여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명망가와 같은 리더가 필요치 않다면 운동의 참여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신사회운동의 특성 중에서 신사회운동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이용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집단의 골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¹¹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본고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운동에서도 「불만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커뮤니케이션은 신사회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은 사회운동에서와 같이 「불만의 공유와 확산」이 아닌 「(사회운동에서의) 조직의 역할 대행」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커뮤니

109) Schneider, Nobert F., *Ewig ist nur die Veränderung. Entwurf eines Bewegungen*, Frankfurt am Main/Bern/New York, 1987, p.43.

analytischen Konzepts sozialer

110) Bonchek, S. Mark, *Political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7, p.22.

니케이션은 신사회운동에게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의 연결망」을 구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운동의 연결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 차원의 운동에서 그 의미를 발휘할 뿐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저항’이 필요할 때에는 각 지역의 운동을 순간적으로 뭉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운동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그러한 연결망을 안정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신사회운동의 추진력과 지속성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는데, 1968년도에 유럽을 휩쓴 학생운동에서 위의 사실이 발견된다. 68년 학생운동은 신사회운동의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지역단위의 커뮤니케이션망 구축, 미디어를 이용한 운동, 대안적인 삶의 형태 제시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68년도 학생운동은 후속되는 다른 이슈에 관한 동원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사회운동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서 지역적 차원의 운동 연결망은 스스로의 지속성을 통해 가시적인 다이내믹을 가능케 하고 대안적인 환경의 문화적 재생산을 가능케 한다. 즉 지역적 차원의 운동 연결망은 한편으로는 문화적 대안의 시험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저항으로부터 권력지향적인 발의를 가능케 하는 대안정당의 구축 사이를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의 운동 연결망은 신사회운동에서 가장 지속적인 동원 추진력을 생산해 낸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조적·조직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발의(Initiative)로부터 동원 추진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지역적 차원의 운동 연결망인 것이다.¹¹¹⁾

이러한 운동의 연결망은 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는 주로 지역의 서점이나 카페를 통해 구축되어졌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인터넷이 연결망의 구축과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한편 신사회운동은 지역적 차원의 운동으로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조직에 반대하고, 관료적 기구의 창설에 반대하며, 권위적인 대변조직 역시 반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신사회운동의 구조적인 발전은 중앙집권화라든지 혹은 계급적인 관료구조, 그리고 조직의 대형화 방향과는 반대로 주제별로 세분화된 전문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독일의 환경운동에서는 관점과 전문성에 입각한 운동의 세분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쓰레기 문제, 핵폐기물 문제, 에너지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핵무장에 관한 문제로 환경문제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들을 다루는 운동단체들도 대체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판물, 인터넷 등을

111) Roth, Roland, *Lokale Bewegungsnetzwerke und die Institutionalisierung von neuen sozialen Bewegungen*, p.414.

운동에 있어 하나의 연결고리로 사용하고 있다.¹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은 중앙집권적인 전국조직에 의해, 그리고 신사회운동은 지역적 운동 연결망에 의해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은 분명 개인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민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란 의미는 문자 그대로 시민의 자발적 주도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특정한 거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운동이라기보다 각 개인의 삶의 침해에 대해 저항하는 형태로 일어난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반핵운동, 반전평화운동, 여성운동, 대안공동체운동 등을 모두 시민운동이라고 취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위에 열거한 운동들이 하나의 단체 혹은 하나의 운동에서 취급되어지는, 다양한 문제의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112) Roth, Roland, "Lokale Bewegungsnetzwerke und die Institutionalisierung von neuen sozialen Bewegungen," in : Friedhelm Neidhardt(Hrsg.), *Öffentlichkeit, öffentliche Meinung soziale Bewegungen*, Opladen 1994, p.415.

VI. 결 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모두 ‘시민’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민운동이 ‘시민’이라는 개념과 관련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본 저서는 앞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논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권리’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공법적인 권리, 즉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불리워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특권’은 점차 보편화되었으며, 이러한 ‘특권’의 보편화 과정은 ‘시민’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의미했다. 또한 ‘특권’의 보편화를 통해 발생한 ‘시민’ 개념의 보편화는 결국 시민사회의 발생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초기 시민사회는 집단적 이익 추구의 성격이 강했다. 집단적 이익추구의 단초는 사실상 중세에서 발생한 ‘계급’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등장은 산업화시대로 진입하면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집단적 이익추구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헤겔(Hegel), 슈타인(Lorenz von Stein), 맑스(Marx)의 사상 속에서 찾아진다. 맑스와 슈타인, 그리고 헤겔은 동일하게 시민사회의 중심에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맑스는 자본주의사회의 개인간의 갈등과 경쟁은 생산관계로 환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과 경쟁은 ‘계급’이라는 ‘집단적 차원’의 경쟁과 갈등으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맑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결국 자본주의사회의 대두는 ‘이익의 집단화’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이익의 집단화는 이익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태동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분명 집단적 이익추구를 위한 문제해결 방식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적 시민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

산업화시대의 초기에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회운동 단체가 정당으로 변모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당의 기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사회의 산물로 나타난 계급이라는 집단이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제도권에 반영하고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운동 단체들의 경우 제도정치권으로 진입, 정당으로 변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들 수 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본래 노동조합이 정당으로 변신한 것으로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회운동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산업사회에서 계급적·집단적 차원의 이익추구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산업사회의 속성상 물질적 욕구충족의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모순이라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산업사회의 모순을 물질적 재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질적 재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모순, 예를 들어 재화의 분배, 그리고 물질적 차원의 욕구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결된다면, 이러한 집단적 차원의 이익추구 근거가 상당부분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저서는 하버마스와 오페의 사상을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오페와 하버마스는 그 이론적 출발점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정당의 기능상실과 물질적 재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극복이 다른 모순을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즉 잉겔하르트의 주장처럼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물질적 차원의 욕구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산업사회적 모순 해결은 후기산업사회에서 탈물질적 차원의 모순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욕구는 산업사회의 물질적 차원의 욕구와는 달리 쉽게 집단화될 수 없는 욕구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분이 뚜렷하여 각 집단간의 이익의 추구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반면 후기산업사회는 마르쿠세의 표현처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이상 산업사회적인 집단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힘든 여건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본가와 같은 종류의 승용차를 탈 수 있으며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같은 종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 표면적 갈등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본가와 노동자가 같은 문제를 놓고 함께 투쟁하는 상황마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노동자와 한 자본가가 같은 동네에 산다면, 그리고 그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시설이 건립되려 한다면 이들은 함께 건립저지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사회에서는 전혀 목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산업사회의 문제해결 수단이었던 사회운동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문제해결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신사회운동인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의 특수성과 이론적 차원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이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선행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한국 사회의 현단계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정치적 측면을 살펴볼 때 과연 언제부터 탈권위주의화 과정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정치적 탈권위주의화 과정은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노태우 정권 역시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논지를 들어 1987년부터 탈권위주의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논지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 1987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시민’이라는 개념과 가장 밀접한 것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따라서 본격적인(기능하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존재했던 국회의원 선거의 부분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구조면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설령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선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차원의 참정권이 존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1987년을 ‘시민’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치적 권리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때라고 한다면, 현재(2002년)까지 불과 16년의 세월밖에 흐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권리 측면만으로 우리의 시민사회가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구와 같이 산업사회의 변화와 정치적 권리의 보편화가 단절 없이 병행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산업화가 압축되어 발생·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산업화의 빠른 진행은 전제적 군사정부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산업사회적 모순의 발생과 문제해결의 노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이익추구를 위한 상황적 요건은 산업화 초기에 이미 존재했지만 본격적인 문제 해결노력은 탈권위주의화 이후에 이루어졌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사회적 상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과 같이 신사회운동이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곳에서는 ‘시민’ 개념이 언제 보편화되었는가,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 본격적인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했으며 신사회운동이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유럽에서 ‘시민의 개념’이 상당히 일찍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민’이라는 개념이 공법적 차원의, 즉 정치적 권리 차원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여성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적용된 시기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과 미국은 1919년, 그리고 영국은 1928년, 프랑스의 경우 194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었는데,¹¹³⁾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유럽에서 본격적인 ‘시민’ 개념이 등장하고 시민사회가 대두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신사회운동이 시작된 시점을 1968년으로 생각할 때, 이는 참정권이 보편화된 이후부터 20여

113) 백경남,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와 현황”, 장공자 外, 「새로운 정치학」, (서울: 인간사랑 1998), pp.7-35, 여기에서는 pp.10-21.

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시민사회에 입각한 시민운동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유럽과 우리의 상황적 비교는 단순한 수적 비교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보의 흐름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흐름 속도의 증가가 모든 면에서의 사회 구조적 차원의 차이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에 입각한 시민운동은 이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단계를 전성기라고 착각한다면 이는 앞으로 계속 진보된 형태의 신사회운동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보는 끊임없는 비판과 오류의 수정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운동을 비롯한 신사회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무오류적 존재라고 착각한다면 이들의 ‘힘’ 역시 견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태환·송호근, 「신사회운동과 정치.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한국사회과학』, 22집 1호,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3
- 권태환·이재열,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한국사회과학』, 20집 3호, 서울 : 서울대학교, 1998. 9
- 김성국, 「신사회운동의 제도화와 급진화 : 영국의 도로건설반대운동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학』, 34집 3호,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9
- 김수진, 「참여작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민족예술』, 58호, 서울 : 민족예술사, 2000. 5
- 김호기, 「4·13 총선과 시민운동 : 총선시민연대의 활동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 『사회비평』, 24호, 서울 : 도서출판 나남, 2000. 5
- 김호기, 「포스트 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4호, 서울 : 한울, 1992. 6
- 김호기,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경제와 사회』, 48호, 서울 : 한울, 2000. 11
- 백경남, 「여성 정치참여의 역사와 현황」, 장공자 外, 『새로운 정치학』, 서울 : 인간사랑, 1998
- 신광영,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2호, 서울 : 한울, 1991. 12
- 신 율,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 유팔무,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25호, 서울 : 한울, 1995. 3
- 이성훈,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과정 -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비교연구」, 『가톨릭대 성심사회학』, 3호, 서울 : 가톨릭대학교, 1997. 12
- 이흥균, 「한국 시민운동의 현단계와 평가」, 『철학과 현실』, 45호, 2000. 6
- 임혁백,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위한 비전 모색」, 『사회비평』, 25호, 서울 : 도서출판 나남, 2000. 8
- 정학섭,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과 사회운동」, 『전북대사회과학연구』, 23호, 전주 : 전북대학교, 1997. 2
- 조대엽,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한국과 국제정치』, 31호,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9. 12
- 조희연, 「『정치체제』와 낙선·낙천운동」, 『창작과 비평』, 107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2000. 3
- 조희연,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정치·민중정치·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46호, 서울 : 한울, 2000. 5
- 황경석, 「시민개혁과 시민운동」, 『철학과 현실』, 45호,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6

외국문헌

Beckmann, Michael : *Theorie der sozialen Bewegung. Anwendung sozial-*

- psychologischer Hypothesen zur Erklärung der Entstehungsbedingungen sozialer Bewegungen*, Diss., München 1979
- Bernd Guggenberger : *Soziale Bewegung*, in : *Staatslexikon*, 7. Aufl., 4. Bd., Freiburg/Basel/Wien 1988
- Bonchek, S. Mark : *Political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7, p.22
- Brunner, Otto : *Land und Herrschaft*, 5. Aufl., Wien 1965
- Carl Schmitt : *Der Begriff des Politischen*, Berlin 1963
- Dirk Berg-Schlosser : *Politische Kultur, Eine neue Dimension politikwissenschaftlicher Analyse*, München 1972
- Döhn, Lothar : "Bürgertum-Bürgerliche Gesellschaft," in : Mickel, W.(Hrsg.), *Handlexikon zur Politikwissenschaft*, Bonn 1986, pp.47-55
- Edward Shils : "The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ie," i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1964
- Ehrenberger, Victor : *Der Staat der Griechen*, 2. Aufl., Bd. I, Leipzig 1957
- Gerhard A. Ritter : *Sozialversicherung in Deutschland und England. Entstehung und Grundzüge im Vergleich*, München 1983
- Grebling, Helga :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Muenchen 1976,
- Habermas, Jürgen :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Frankfurt am Main 1973
 _____ : *Theorien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 am Main 1981
- Hegel, Georg Wilhelm Friedrch : *Grundlinie der Philosophie des Rechts*, Frankfurt am Main 1993
- Ingelhart, Ronald : "Value, Ideology and Cognitive Mobilization in New Social Movement, Challenging the Political Oder" :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 in Western Democracies*, Londen 1990
- Joachim Raschke : *Soziale Bewegungen. Ein historisch-systematischer Grundriß*, Frankfurt am Main/New York 1988
- Jürgen Nowak : *Soziale Probleme und soziale Bewegungen. Eine praxisorientierte Einführung*, Weinheim/Basel 1988,
- Lorenz von Stein : *Die Volkswirtschaftslehre*, 2. Aufl., Wien 1878
- Lucian W. Pye : "Political Culture," i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1968
- Marcuse, Herbert :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 Marx, Karl : "On the jewish Question," in : *Marx-Engels Collected Works*, New York 1975,
- Mommsen, Theodor : *Römisches Staatsrecht*, Bd.3, Leipzig 1888
- Neil J. Smelser : *Theorien des kollektiven Verhaltens*, Köln 1972
- Offe, Claus :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Cambridge, 1984
 _____ : "New Social Movement" :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

- 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4, 1985
- Ottheim, Rammstedt : *Soziale Bewegung*, Frankfurt am Main 1978
- Pankoke, Eckart : *Sociale Bewegung-Sociale Frage-Sociale Politik*, Stuttgart 1970
- Patrick V. Dias : “Der Begriff ‘Politische Kultur’ in der Politikwissenschaft,” in : Dieter Oberndörfer(Edd.), *Systemtheorie, Systemanalyse und Entwicklungsländerforschung*, Berlin 1971
- Paul E. Sigmund : *The Ideologies of the Developing Nations*, New York/London, 1963
- Peter Koslowski : “Sozialphilosophie,” in : *Staatslexikon*, 7. Aufl., 5. Bd., Freiburg 1989
- Riedel, Manfred : “Bürger, Staatsbürger, Bürgertum,” in : Brunner, Otto, u. a. (Hrs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Stuttgart 1992, pp.672-725
- Roth, Roland : *Demokratie von Unten. Neue soziale Bewegungen auf dem Weg zur politischen Institution*, Köln, 1994
- _____ : “Lokale Bewegungsnetzwerke und die Institutionalisierung von neuen sozialen Bewegungen,” in : Friedhelm Neidhardt (Hrsg.), *Öffentlichkeit, öffentliche Meinung soziale Bewegungen*, Opladen 1994
- Schneider, Nobert F. : *Ewig ist nur die Veränderung. Entwurf eines analytischen Konzepts sozialer Bewegungen*, Frankfurt am Main/Bern/New York, 1987
- Von Sien, Lorenz : *Die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I. Band.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der Socialismus und Communismus Frankreichs von 1830 bis 1848*(unveränderte photo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 _____ : “Der Begriff Arbeit und die Principien des Arbeitslohnes in ihrem Verhältnisse zum Socialismus und Communismus,” in : *Zeitschrift für die gesammte Staatswissenschaft*, 3.3 Jg., Tübingen 1846
- _____ : *Der Socialismus und Communismus des heutigen Frankreichs. Ein Beitrag zur Zeitgeschichte, zweite umgearbeitete und sehr vermehrte Ausgabe*, Leipzig 1848
- _____ : *Die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 Band. Der Begriff der Gesellschaft und die soziale Geschichte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bis zum Jahr 1830*(unveränderte photo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 _____ : “Ideen zur Geschichte der Arbeit,” in : *Deutschland Vierteljahresschrift, Erstes Heft, Erste Antheilung Nr. 45*, Stuttgart/ Tübingen 1849

_____ : *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in Frankreich von 1789 bis auf unsere Tage, III. Band. Das Königtum, die Republik und die Souveränität der französischen Gesellschaft seit der Februar- revolution 1848*(unveränderte photomechanische Nachdruck der von Gottfried Salomon im Drei Masken Verlag München herausgegebenen Ausgabe von 1921), Darmstadt 1959

Wieacker, Franz : *Recht und Gesellschaft in der Spätantike*, Stuttgart 1964

Wobbe, Theresa, Rosa Mayreder : “Zum typischen Verlauf sozialer Bewegungen,” in : *Forschungsjournal NSB, Heft 2*

시민사회, 사회운동, 신사회운동

: 시민운동의 이론적 이해

2002년 6월 21일 1판1쇄 발행

2020년 7월 23일 1판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 자유기업원, 2020

비매품